금속노조통신 050호

발행일 2022년 08월 11일(목) ❙ **발행인** 윤장혁 ❙ **SNS** 페이스북 · 카톡채널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 대처에 구멍

중대재해 노동부 감독행정 문제점 토론회 … 신속 압수수색 · 구속 수사 · 수사감독 일원화 등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이 지난 가운데,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동부가 수사와 감독행정을 일원화하고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8월 10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산재 예방이 우선 목표라는 행정철학과 이에 걸맞은 집행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사회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맡았다. 주최 측은 토론회를 금속노조의 현장증언과 노동부 중대재해 행정처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발제로 구성했다. 이날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함께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기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현대중공업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원인으로 ▲노동부의 소극 · 늑장 대응 ▲허울뿐인 작업중지 명령과 현장 감독 부실 ▲솜방망이 처벌 ▲현대중공업 원청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를 꼽았다.

최기철 부지부장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한다"라면서 "사내하청업체 안전관리를 현대중공업이 직접 하라고 요구했지만, 불법 운운하며 거절했다"라고 폭로했다. 최 부지부장은 "현대중공업은 전국 최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다. 노동부가 기업 감싸기를 멈추고 특별관리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준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응알앤티지회 사무장은 지난 2월 현장에서 유해물질 트리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집단 급성 간염이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부가 수사 업무와 감독 업무를 분리하면서 생긴 늑장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김준기 사무장은 "노동부 양산지청이 조사한 사건을 부산청이 또 조사하고,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서 실효성 없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라며 "원인조사와 개선대책을 빠르게 세워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반복 조사로 노동자들은 긴 시간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수사와 행정의 분리로 현장의 혼란이 컸다. 중대재해조사는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여섯 개 광역단위 노동청이 담당하고 있다. 김준기 사무장은 "행정 조치는 양산지청이 하고, 중대재해조사는 부산청이 담당한다. 당시 양쪽에 전화하면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했다. 노동자들은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혼란이 컸다"라고 밝혔다.

김삼열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동안전보건차장은 현대제철 산재 사고 사례를 들면서 수많은 사고와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벌어진 동일 · 유사 공정의 위험 요소를 지적하지 않는 노동부의 소극 행정을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유사 · 동일 공정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으나, 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노동자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측의 대응이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조사과정을 비공개한다며, 재해예방이라는 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유를 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 중대재해 행정 문제점으로 ▲수사 기본 현황 비공개로 불신 확대 ▲비공개 수사로 실제 재해 원인 규명 난망 ▲작업중지 명령 범위 축소와 현장 확인 없는 작업중지 해제 남발 ▲수사와 감독 이원화로 현장 혼선 발생 등을 지적했다.

최 실장은 개선 요구로 △신속한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중대재해 수사 경과 공개 △노동자 당사자 · 유족 참여 보장 △중대재해 사후 즉각 특별근로감독 △작업중지명령 범위 확대 △하청노동자 임금 보전 △작업중지명령 해제 시 철저한 현장 확인 △수사 · 감독 행정 일원화를 제시했다.

“달나라·미국 말고 국내공장·미래 고용 투자하라”

기아차지부, 산업전환기 국내 투자 촉구 기자회견 … 동희오토, 기아 법인 통합도 요구

2022년 임금·단체협약 쟁취 투쟁 중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현대자동차 재벌에 산업전환기 미래 고용 창출과 국내공장투자를 촉구했다.

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8월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자동차 산업 대전환기 미래 고용 확보를 위한 국내 투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이날 오후 소하공장 본관 앞에서 ‘2022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거행한다.

홍진성 기아자동차지부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아난다”라면서 “ 미래 고용은 노동조합의 요구이지만, 정부와 회사가 노동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홍진성 지부장은 “정부와 현대차 등 재벌은 미래 신사업을 국내공장에 투자함으로써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제조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홍 지부장은 “기아는 신사업 확대를 천명하지만, 경차를 생산하며 수익 창출에 기여한 동희오토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 환경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동희오토를 기아 법인에 통합해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13조,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최근 달 탐험선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홍보했다”라면서 “사측이 투자해야 할 곳은 해외도 우주도 아닌 대한민국, 국내 일자리다”라고 꼬집었다.

기아자동차지부는 “사측은 생산 축소 사업장과 공정을 대체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국내공장 신설·신규 투자하고, 전기차 핵심부품을 공장 안에서 생산해야 한다”라며 “사측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전기차 핵심부품 생산계획과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철회하라”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임원·상집, 소하지회, 화성지회, 광주지회, 판매지회, 정비지회 임원·상집들은 “기아차지부 선봉투쟁 고용안정 쟁취하자”, “일자리를 창출하라. 재벌이 책임져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지부는 8월 9일 2022년 임단협 6차 본교섭을 열었다. 지부는 동종사 교섭 결과에 연연해 사측이 고민한다면 파국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지부는 사측에 11일 교섭에서 일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